

경운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연구노트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자료의 중복사용이나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를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논문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

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연구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회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고의로 부 적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라.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의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 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신설 2021.12.01.]

제5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연구윤리 확립 및 수립,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진실성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연구처에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1.12.01.>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산학연구처장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1.12.01.>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01.>

1. 제보내용(대상이 된 연구를 포함한다)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01.]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관련 교직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01.>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0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